

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8.

발 의 자 : 한민수 · 조인철 · 송옥주  
황 희 · 이연희 · 이병진  
황정아 · 박해철 · 임오경  
박희승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을 명하거나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,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,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.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, 과태료

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·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,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50조 및 제86조 등).

##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거·파기등의 명령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이하 이 조에서 “수거·파기 등””을 “이하 “수거·파기등””으로 한다.

제48조 중 “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 또는 제조·수입·판매·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”를 “수거·파기등을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9조의 제목 중 “수거·파기 등”을 “수거·파기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 또는 제조·수입·판매·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”를 “수거·파기등을”로 한다.

제50조의 제목 중 “수거·파기 등”을 “수거·파기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”를 “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”로, “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을 명하거나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,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(改修) 그 밖의 필요한 조치”를 “수거·파기등 및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(改

修)(이하 “수거등조치”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수거·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”을 “수거등조치를 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제1항에 따른 명령과 제7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거등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
1.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
2.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
3.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
4. 수거등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
5.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조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

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 (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명령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이행하여야 하며,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수거등조치의 내용과 실적
2.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
3.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에게 수거등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,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2조 본문 중 “제50조”를 “제50조제1항”으로, “제80조의 규정”을 “제8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제50조제1항 단서”를 “제5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1항제1호 중 “제50조”를 “제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5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2. 제50조제4항에 따른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3. 제50조제5항에 따른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거·파기등의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물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시정요청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	제46조(시정요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	2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·과기 등의 명령</u>	나. <u>제50조제1항에 따른 수거·과기등의 명령</u>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7조(결함정보의 보고의무)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(전자적	제47조(결함정보의 보고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보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 또는 제조·수입·판매·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(이하 이 조에서 “수거·파기등”이라 한다)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· 2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48조(물품등의 자진수거 등)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 또는 제조·수입·판매·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9조(수거·파기 등의 권고 등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

이하 “수거 · 파괴 등”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물품등의 자진수거 등) --

-----수

거·파기등을 하여야 한다.

제49조(수거·파기등의 권고 등)

① \_\_\_\_\_



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 또는 제조·수입·판매·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50조(수거·파기 등의 명령 등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·파기·수리·교환·환급을 명하거나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,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(改修)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수거·파기등을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수거·파기등의 명령 등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그 사유와 의무사항  
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 
을 정하여 서면으로-----  
---수거·파기등 및 그 물품등  
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(改修)  
(이하 “수거등조치”라 한다)---  
-----<단서 삭제>

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거등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.

1.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
2.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
3.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
4. 수거등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
5.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

<신 설>

<신 설>

수거등조치의 계획을 알리기  
위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으  
로 정하는 방법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 
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가 소  
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  
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 
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  
고 인정되면 그 계획서의 보완  
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  
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  
등조치(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  
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명령  
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  
다)를 이행하여야 하며, 수거등  
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 
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  
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  
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 
다.

1. 수거등조치의 내용과 실적
2.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 
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
3.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  
책

<신 설>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·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에게 수거등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,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-----  
----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수거등조치를 할-----  
-----.

⑦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⑧ 제1항에 따른 명령과 제7항

<p><u>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</u>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82조(청문)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20조의3제3항·제20조의4 제1항·제30조·<u>제50조</u> 또는 <u>제80조</u>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 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 만, <u>제50조제1항 단서</u>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8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<u>제50조</u> 또는 제80조의 규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86조(과태료) ①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에 따른 공표방법 등 필요한</u> <u>사항</u>-----.</p> <p>제82조(청문) ----- ----- -----<u>제50조제1항</u>----- <u>제80조</u>----- ----- -----<u>제50조제5항</u>----- -----.</p> <p>제84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50조제1항</u>----- ----- 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</u> <u>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 <p>1. <u>제5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</u> <u>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</u> <u>으로 제출한 자</u></p>
--	---

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	<p><u>2. 제50조제4항에 따른 수거등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</u></p> <p><u>3. 제50조제5항에 따른 수거등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</u>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-